

# 전남도, 방산혁신클러스터 도전...우주산업 거점 기대

## 고흥 우주발사 인프라·순천 제조기반 결합 발사체 산단·국방위성 시설 등 생태계 구축

전남도가 우주발사 인프라와 제조 기반을 결합한 '국방우주 산업 거점' 구축을 목표로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도전장을 냈다.

고흥의 우주발사체 인프라와 순천의 정밀 제조 역량을 묶어 우주와 방산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

상이다.

전남도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에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국가 핵심 사업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주발사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대에는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제2공구는 고체연료 기반 발사체 제조와 국방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구축되고 있다.

여기에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과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조성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우주발사체 개발과 국방우주 분야를 동시에 아우르는 산업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제조 기반도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는데, 전남의 우주발사 인프라가 이러한 국가 전략을 실현할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우주 인프라와 제조 기반을 결합해 '우주·방산 융합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우주 전략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우주안보 강화와 국방위성 발사 능력 확보, 우주발사체 기술 자립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남의 우주발사 인프라가 이러한 국가 전략을 실현할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방위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이어왔다.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방위산업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한화와 현대로템, 대한항공, 이노스페이스 등이 참여하는 전남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

축했다.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우주발사체와 국방위성 등 차세대 방산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식식 전남도 우주산업과장은 "전남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우주발사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며 "우주를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국방우주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시·도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개최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행안부·전남도·광주시, 행정통합 실무논의 본격화

### 특별시 출범준비 첫 회의...지방선거 전 시행령 제정 준비기구 설치·정보시스템 통합 등...“행정 역량 집중”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논의가 시작됐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시·도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행안부 내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

원단과 광주·전남의 부단체장 및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공식 회의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올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공유했다.

통합 준비의 핵심인 출범 준비 기구 설치와 정보시스템 통합 방안 등을 설명하고 두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도 현재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정부 지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 의견을 전하며 의견을 나눴다.

정부와 지자체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시기별 맞춤형 준비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올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통합특별법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고 분야별 지침에 따라 조직, 재정, 자치법규 통합 등 핵심 출범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최초 임시회에서 필수 조례안을 의결하고, 대민서비스와 주요 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순차적 통합 개통을 추진한다.

정부는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내 전담 부서를 두고, 두 시·도가 통합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은 기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통합특별시 예비후보, 16일까지 등록의사 신고

### 신고 없으면 기존 예비후보 등록 무효 처리 공무원 등은 15일까지 시작해야 출마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들은 오는 16일까지 등록 의사를 다 시 신고해야 한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 전남·광주 시도지사과 교육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의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진행된 예비후보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의사 신고는 선거 종류에 따라 접수 기관이 다르다.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역구 광주특별시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야 한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사지 기한에도 특별법이 적용된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은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통합특별시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특별법에 따라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다만 광주특별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규정(3월 5일까지 사직)을 따라야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준도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적용된다.

폐지되는 전남도와 광주시에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을 갖게 되며, 해당 지역에 60일 이상 거주한 경우 피선거권도 인정된다. 또한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의 재임 횟수는 통합특별시장 재임 횟수에 포함되고, 교육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의 시도지사과 교육감, 시도의회 의원이 통합특별시장이나 통합특별시의회의 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의사 신고와 공무원 사직 기한 등 일부 선거 규정이 변경됐다"며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들은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1면 '햇빛소득마을'서 계속

대출 상환 기간에는 연 320만원, 상환 완료 이후에는 연 800만원 안팎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굳은 추산하고 있다. 발전 수익은 전액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되며, 복지와 공동체 사업에 재투자된다. 군이 설치비의 50%를 지원해 초기 부담을 낮춘 점도 사업 정착에 기여했다.

전남도는 정부 공모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나섰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해 470개 마을의 참여 의향을 확인했다. 제출된 대상지는 입지 조건과 전력 계통 연계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곳은 시군과 협의해 정비 중이다. 공모는 3월 공고, 5월 신청이 예상된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전

남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늘면서 일부 지역의 전력망이 포화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계통 여유가 부족한 지역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국비 지원은 50% 수준이다. 도는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ESS 국비 지원 비율 향상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금융 여건도 변수다. 농지 등의 담보 가치가 낮아 자금 조달이 쉽지 않

다는 점을 감안해, 전남도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모 평가 가점 도입과 저부담 비율 완화도 요청하기로 했다.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지 않으면 실제 현장 확산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대상 마을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협동조합 구성과 사업계획 수립을 돕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 사업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도 개선 과제도 정부와 지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 도, 무안공항 재개항 대비 관광객 유치 모색 25개 여행사와 논의...노선 확대·인바운드 유치 전략도

전남도가 수도권 여행업체와 손잡고 관광객 유치 확대와 여행상품 공동 마케팅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을 앞두고 관광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전남관광재단 지난 6일 서울 용산역에서 수도권 협력여행사 초청 간담회를 열고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과 전남 관광상품 공동 홍보 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관광객 유치 실적과 마케팅 역할을 평가해 지난달 선정된 전남도 협력여행사 25개사가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2026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남도는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 추진 계획을 소개하고 섬 반값여행, 주민과 함께하

는 섬 트레킹과 캠핑 프로그램 등 제

류형 관광상품을 설명하며 여행업체의 참여를 요청했다.

미시·웰니스·정원·사찰 등을 중심으로 한 전남 대표 관광상품과 반려견 동반여행(펫트레블), 파크골프 힐링 여행 등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협력 방안도 공유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재개항과 관련해 전남도의 준비 상황과 정부 동향을 안내하고, 재개항 이후 항공 노선 확대 전략과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 여행

업체와 의견을 나눴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함께 뛰는 협력여행사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며 "여행업체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전남 관광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지속 추진

### 피해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남도가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전남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며, 전남주거복지센터가 신청 접수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을 총 1억5000만원 규모(150명)로 지원해 피해 도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도민이며, 1인당 100만원을 생애 1회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일상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피해 주택이 전남도 내에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어야 한다.

다만 중복 지원 방지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부 대상은 제외된다.

타 시·도 소재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라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된다.

단, 지원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거비용 19억3000만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약 19억3000만원으로 확정됐다.

8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로 선거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시장·교육감 선거와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9억3444만 5364원으로 정해졌다.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2914만 9252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통합으로 선

거구 내 인구가 늘어나면서 통합 확정 이전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선거 비용과 비교하면 기준이 크게 높아졌다.

당초 선관위는 통합 이전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광주시장 약 7억 2400여만원, 전남지사 약 15억8000여만원으로 각각 공고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역시 광주 비례 의원 약 1억2800여만원, 전남 비례 도의원 약 1억5000여만원 수준이었으나, 통합 선거구 기준으로 재산정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구 내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이번 지방선거에는 물가 변동률 8.3%가 적용됐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